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0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- 과장 박병석, 사무관 백정호, 주무관 문제근 ☎ (044) 201-3541, 3540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

기능인등급제·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경력관리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 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,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도 나선다.
-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, 현장 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, 외국인 고용허가제,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.
-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(더럽고, 어렵고, 위험한) 업종 기피,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으며,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

◆ ‘건설현장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’ 개요

- (기간) 2018년 3월 26일(월) ~ 4월 13일(금)
- (대상)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* 공사현장의 건설업체 담당자
 - * LH, 도로공사, 수자원공사, 철도시설공단(4월 2주)
- (주요 내용)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

-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,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, 고령화,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.
- 또한,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도 별도의 경력관리 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’을 발표하였으며,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
-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·자격·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·관리하는 제도로,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,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“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백정호 사무관(☎ 044-201-35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